

국민의힘 “조작 기소 특검법”, 李 면죄부 법”… 3:3 공개토론 제안

송언석 “李 재판 없애고 불리한 증인자 보복 수사”

정점식 “與 일방적 밀어붙이기… 국민 알권리 위면”

국민의힘이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기소했던 걸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 세워 불리한 진술을 증명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 목적도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를 입맛에 안 맞는 증인을 했던 증인 31명을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법적 증거인 채택과 뒷받침은 호통 속에서 도 무리 회피했거나 전혀 다른 증인을 썼다는 건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검찰위원 회가 이 대통령에 대복속 사건

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정계 여부를 심의했다”며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종과 탄압 앞에서 상각된 개만도 못한 심세가 된 지 오래인데, 박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할 것인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휘관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기관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력과 정치 보복에 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소취소 특검은 현직 대통령 재판을 지결된 한국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 공개검증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국민

알 권리를 위면하는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회 지휘기 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밀실 논의가 아닌 국민 앞 투명한 검증은 필수”라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3대3 공개 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재와 정승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행정준비도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주당은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며 “민주당이 토론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면죄부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개검증에 응할 자신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소취소 특검을 철회하라”며 “지신 앞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개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충청권 메가시터 완성!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인사추진위원장 정창태 대표가 12일 충북 청주시 연도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권자대회에 참석해 이시종 상임선대위원장, 신용환 충북도지사 후보 등과 함께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특공제 개편엔 일시적 비거주 주택자 양도세 부담 대폭 증가”

이종욱 “거주공제를 상향 방식 최대 2.5배 세부담” 지적

더불어민주당 법·형사위원회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도 병양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가 된 1세대 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12일 나왔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현행 대비 최대 2.5배 수준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12월 초와 시나리오별 산출액에 변화’ 자료에 따르면 산출액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

대 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한다. 보유공제 폐지 대신 거주공제를 2배(최대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3040만원 늘어난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비거주자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공제를 폐지할 경우 5년 보유·3년 거주 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144만원, 10년 보유·5년 거주자는 6120만원 각각 증가했고,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를 2배로 높이는 경우에도 각각 1224만원, 3040만원 증가했다. 반면 실거주 기간이 없는 단순 보유자의 경우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가 없었다. 정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실거주자 중심 구조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장특공제 개편시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은 없는 반면, 실제 거주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부담주인 사유로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들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도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을 입춘해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고려해 기준으로 삼아 인원이 양호하도록 하는 것이 오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춘책임을 떠넘기고

행정 혼선과 세금 불만인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입 37년만에 양도세 장특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위한 당(여당)·정(정부)·청(청와대)의 역할 메시지를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은 “점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연일 손사래를 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다양한 중심으로 장특공 개편 관련 방안 발표가 잇따르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한동훈 “카메라 기자 낙상 사고 인지 못해” 권영세 “韓, 나무호 모르는 정부와 같아”

韓측 “영상 편집 유묘자 고발”

權 “정식 못해, 인정·사죄를”

최근 유세 현장 촬영 중 단상에서 떨어진 카메라 기자 사고를 대하는 한동훈 후보의 처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언론계 인사들은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여론의 반감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한는 건 정지하지 못한 태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데 대해서도 “영상을 보면 (한 후보가) 뒤돌아서 (사건현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나온다”라며 “자뉘들이 물리고 소리도 났을 텐데 몰랐을 리는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측은 “영상을 보면 카메라 기자가 넘어지는 것을 한 후보가 인지할 수 없었다는 건 명백히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가 ‘보수 재건’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야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재가 틀은 바

권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며 최근 ‘나무호’ 피격 직후 “(인원을) 집회 모른다”고 했다” ‘외부의 미사일이 아니라 동쪽’으로 말을 바꿔 “거짓말 천진”을 통틀어 정부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재가 생각이 없었다’고 바로 인정했어야지, 못 봤다고 얘기

하고 알려줘야 했다”며 “그리고 보수 재건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하는데 한 후보는 같이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며 “나만 옳고 상대는 무조건 아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특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22일 앞둔 서울 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권 의원은 “서울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세제 부당이고 특히 가격 부등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들을 좀 눌러줘야 어느 순간에 타진 다”라며 “결국은 오랜 시장이 ‘타격’ (타격)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공급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원순 시장 때 300여(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했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오 시장이 이번엔 당분간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서 판단만 수도 권도 부동산 문제가 줄어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 후보들은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해각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호소했다.

박지원 후보는 “신발끈을 다시 매고 짐을 나신타”라며 “많은 권리당원들이 박지원에게 투표해달라고 문자 등 여러차례 폭주하는데, 꼭 1번 박지원에게 투표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 당심이 천성이야. 여기에 박지원의 진심을 담는다”라며 “박지원의 간절한 진심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후보는 전날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함한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통지로서 같은 길을 걸었던 공주시”이라며 “이재명

박지원 vs 조정식 vs 김태년… 차기 국회의장 오늘 윤곽

국회의장단 20일 최종 선출

12일 후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마무리되고 이후 13일 의원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장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내 국회의장 후보는 박지원·조정식·김태년(기호순)의 3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비율은 20% 이상 현장 투표 비율은 80%다.

국회 의사 구조상 이번 민주당 선선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차기

대포 시절 사무총장으로서 검찰의 칼날을 맨몸으로 맞았고 22대 총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탄압을 당한듯이 여러분과 함께 근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출한 정부부총장 출신, 조 정경이에게 국회의장을 맡겨달라”며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선 당정협조와 국회 운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후보도 전날 “국민적 다시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증명하겠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력이다. 저 김태년은 해본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코로나 위기 속 국회를 책임졌고 정책위의

장으로 민생·경제 입법을 조율했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주당공약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 집권의 토대 마련에 만능이었다. 이재명 국민지원정책의 성공을 완성시킨 사람, 실력이 다른 김태년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에는 남인수·민홍철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박복용·조세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 1·2당인 양당은 각각 한 명씩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양당에서 뽑힌 국회의장단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방부등서 비행체 진해 조사”

조현 “유관국과 지속 소통” 보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타격 사건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행체)진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한다.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종군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결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격에 사용된 무기 잔해를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조사에 의뢰할 수 없다. 외국 전사 상황에서 군사공무기에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을 받은 사람이 때문에 외교차원에서 접근하고 공적의 의도성 등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안전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정밀 조사에서는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은 이밖에 드론 ‘사해

드-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실질적 (초기) 판단을 위해서가 어렵다”고 응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상황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8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비행체 두 대가 나무호를 두차례 타격한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 조사서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한다”며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현재 외교 해협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두고 연

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조세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피격 정황이 명백했는데 정부는 일주일내 내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의 선박 나무호가 공격받았지만 일주일도 지나서야 정부가 유무죄를 판단해준다는 건 정부의 태도가 ‘비상 비행체 27기’ 사체를 타격했다고 공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묻는 것은 다 하나다. 정부는 물라서 누가 대를 갖겠지, 어떤 면이고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두들기거나 의도적 침묵 둘 중 하나로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 우리 선박이 공격당했는데도 개해자를 지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정황은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늘 일주일 동안 사실을 숨겼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李대통령 “상록수 연체 채권 여전히 추심… 국민적 도덕 감정 맞나” 쓴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상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관련해 “금융이 좀 정돈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에 상충한 연체채권을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준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찰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을 도용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금 조건의 영업이익을 내면서야 백

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고집했다.

이어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나, 그 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붙어 몇천만 원이 몇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못이나,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도 문제 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없게 하지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 집권의 토대 마련에 만능이었다. 이재명 국민지원정책의 성공을 완성시킨 사람, 실력이 다른 김태년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에는 남인수·민홍철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박복용·조세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 1·2당인 양당은 각각 한 명씩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양당에서 뽑힌 국회의장단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론의 눈에는 의대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자신의 의제장을 통해 해당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제라도 이런 정치적 약탈행위가 버티지 살아남아 시민들의 목숨을 고고 있는 줄 몰라라”라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토론했다”라며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감에도 정도가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도 정당한 관계가 없어 할 공생체간의 우리 이웃간의 과잉부담”이라고 비판하며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